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】

의안번호

419

2024. 4. 22.

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: 2024. 4. 4. / 박윤옥 의원 등 12명

나. 회부일자: 2024. 4. 4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4. 4. 22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환경계획 등을 수립·추진하기 위한 “환경정책위원회”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, 기본이념 및 정의(안 제1조~제3조)
- 시의 책무, 사업자의 책무, 시민의 권리 및 책무(안 제4조~제6조)
- 환경계획의 수립 등, 자원의 순환적 사용 촉진 추진 등(안 제7조, 제8조)
- 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 등 및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(안 제9조, 제10조)
- 환경조사 및 전문성 확보 등,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(안 제11조, 제12조)
-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 등(안 제13조, 제14조)

-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, 제척·회피·기피(안 제15조, 제16조)
- 위원장의 직무, 협조 요청, 수당 등(안 제17조~제19조)
-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, 협력 등(안 제20조, 제21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서용관)

- 본 안건은 상위법인 「환경정책기본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들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임.
- 주요개정 내용은 환경보존(기본)계획의 명칭을 법령에 따라 환경계획으로 변경하고 환경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시·도의 환경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
- 효율적인 환경계획 등을 수립·추진하기 위한 “환경정책위원회”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이 없어진 의제 21의 추진 조항을 삭제하였음
- 본 조례는 남양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 및 책무와 시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입법체계나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

4. 질의·답변요지: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: 없 음

6. 심사결과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: 없 음